월요광장

두 개의 시계로 사는 삶에 대하여

심 옥 숙
인문지행 대표

요즘은 마치 두 개의 다른 시간대를 사는 듯하다. 세상 사람들이 다르게 가는 두 개의 시계를 사용하는 것처럼 말이다. 어느 쪽에 맞춰야 지금의 시간을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인가. 게다가 이 두 개의 시계가 서로 다른 시간대로 가면서 반대 방향을 가리킨다면 이보다 더 끔찍한 불행은 없을 것이다. 동시에 두 개의 다른 시간대에서 사는 것은 함께 일어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동시에 일어나며, 나란히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비유하자면 이런 모습은 한 사람이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두 개의 시계를 차고 있는 것과 같다. 이런 모순되고 혼란스러운 현상을 두고 '비 동시성의 동시성'이라고 말한다. 독일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흐(1885~1977)가 말한 개념이다. 블로흐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 것처럼 사람들이 현재의 시간대에 함께 살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우리 상황과 주변을 볼 때 너무나 쉽게 이해와 공감이 되는 말이다.

블로흐가 말하는 비 동시성의 동시성은 그 당시 독일 사회를 규정하는 표현이다. 당시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현재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 시기 독일은 1870년대의 권위주의적인 방식의 전근대적인 시대였다. 이미 민주화된 헌법이 있었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문화도 자리 잡았다. 하지만 독일은 시대착오적인 민족주의와 전체주의를 신봉하는 시대적 역주행을 멈추지 못했다. 이러한 모순과 역행의 시대에서 블로흐가 주목한 것은 같은 시대를 살지만 "다만 외형적으로만 동일한 현재에 존재할 뿐이다"라는 현상이다. 외형적으로 동일한 시대를 산다는 것,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갈등하며 고통을 겪는 문제의 열쇠를 찾을 수 있다.

겉으로는 하나의 사회에 속하며, 친밀한 집단과 관계 속에서도 분별력과 판단력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서로가 다른 시계를 차고 다른 속도와 방향의 시간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없는 현상들이 보여주는 다른 시간대의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곧 비 동시성에 속한다. 즉, 함께 나란히 있을 수 없는 사회적 문화적 요소가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비 동시성이다. 하지만 함께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되는 것이 버젓이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동시성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비 동시성의 동시성을 행하고 겪으면서 고착시키고 있는가. 사실 우리는 수많은 이유로 두 개의 시계를 차고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기도 한다. 사실 이성적 사고와 민주적 자유를 말하면서 타인의 생각과 자유는 인정하지 않거나 첨단 기술의 시대에도 의식은 여전히 봉건적 시대와 권위주의의 시계에 맞춰져서 돌아가는 것을 흔하게 본다. 그 예가 자신의 판단과 선택은 절대화하지만 필요하면 언제든지 인맥과 학맥, 심지어 죽은 조상과 무술까지 동원하고 이용하는 태도다. 이보다 비 동시성의 동시성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은 없다. 그러니 자기 능력과 노력보다는 인맥과 학맥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인간관계의 목적인 상호적 발전, 책임은 사라지고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의리와 도리가 윤리와 책무를 대체한다. 바로 두 개의 시계가 작동하는 원리이자 이유다.

겉보기는 미래지향적 의식으로 충만해 보이고 또한 이에 상응하는 태도 역시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하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시대착오적 위장과 위선은 오래 갈 수 없다. 시대정신과 동행하는 변화와 선택은 결단과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만의 의식과 태도는 요란하고 화려하게 보여도 한순간에 본질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현재의 시간 속에서 살아 숨 쉬지 않는 의식은 뒤로 돌아가는 시계에 집착한다.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시간은 미래를 잉태하지 못하고 오직 불화와 대립 그리고 반목만을 반복한다. 뒤로 가는 시계는 앞으로 나가는 시계를 붙잡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두 개의 시계를 사용할 것인가. 마침내 한 고개를 넘어선 듯하다. 이제 오직 하나의 시계, 주저함이 없이 앞을 향해 나가는 시계만 돌아가야 한다.

수필의 향기

새의 집

김 향 남
수필가

높이 솟은 나무 위에 새집이 하나 걸려 있다. 나무 위에 터를 잡기는 했어도 허공이나 다름없는 곳이니 높이만큼이나 아찔하고 위태로워 보인다. 정말이지 '걸려 있다'고 밖에 할 수 없는 저 집은, 집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단순한 건축물이다.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지은 집이니 바람도 비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알을 낳고 새끼들을 기르기 위해서라면 지붕 정도는 있어야 할 터인데….

어쩐지 애틋한 마음이 들어 한참을 올려다본다. 새들도 제 가정을 일구느라 저리 애를 쓰는구나 싶으니 동병상련의 마음도 생긴다. 세상에 목숨 받아 분투하며 살아가는 꼴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에 연민하는 마음도 한층 깊어진다. 그러나 그 마음 뒤에는 늘 감탄과 부러움이 뒤섞인다. 새들에게도 집은 생존을 위한 안식처이자 사랑을 싹틔우는 보금자리이며 새 생명을 품어내는 요람임이 분명하나, 그들에게 집이란 인간의 집과는 확연히 다르다.

새의 집짓기는 진화도 발전도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같은 재료, 같은 공법으로 같은 집을 짓는다. 면적도 디자인도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작은 나뭇가지 같은 것을 물고 와 얼기설기 얽어놓을 따름이다. 도구라고 해봐야 제 몸뚱이뿐이다. 부리로는 나뭇가지 등의 자재를 운반하고 축조하며, 가슴으로는 쌓은 벽을 굳건히 다진다. 오롯이 제 몸과 제 힘으로 마련한 둥지에 신접살림을 차리고서 생명을 낳고 길러낸다. 다 자라면 미련 없이 떠난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새집은 엉성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어떤 인간도 저 새가 지은 집보다 더 알맞은 집을 짓지 못한다. 인간의 집이란 언제나 너무 크고 너무 많은 것을 늘어놓는다. 새는 제 몸에 딱 맞는 집을 짓고 그 안에 안정과 따듯함과 헌신과 사랑을 담는다. 그밖에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는다. 새는 누구도 부리지 않고 무엇도 훼손하지 않으며 가장 최소한의 필요만 취하고선 그마저도 훌훌 놓아버린다. 수없이 반복된 노동과 제 몸의 희생을 통해 얻은 새들의 둥지는 오직 생명을 키워내는 사랑의 보금자리일 뿐 다른 의미는 없다. 알을 낳고 품어 새 생명이 자라나는 일정 기간을 제외하면 누구도 그에 연연하지 않는다.

나무 위의 집은 지금 여기의 나를 저 유년의 그때로 되돌려준다. 새집과는 비교도 안 되게 크고 화려(?)했지만 알고 보면 흙과 나무와 풀로 엮은 집이었다. 새집이 그렇듯이 오직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써서 부모님이 손수 지으신 또 하나의 자연이었다. 그곳에는 자나깨나 먹이를 기다리는 자식들과 묵묵히 먹이를 나르는 두 분이 계셨다. 사락사락 댓잎 흔들리는 소리와 적막을 몰아내는 닭 울음과 그리고 처마 밑의 제비들, 그 집에는 제비도 함께 살았다. 제비는 둥지 안에 알을 낳고, 알을 품고, 알 속에서 새 생명이 탄생했다.

제비 가족의 나날은 몹시도 소란스러웠다. 주둥이를 있는 대로 벌리며 아우성치는 새끼들과 그 속에 쏙쏙 먹이를 넣어 주는 부모가 종일토록 부산했다. 가끔 머리 위에 똥을 갈기면서도 내 눈치 따윈 아랑곳하지 않았다. 둥지 안의 새끼들은 왜 그리도 당당한지, 멀리까지 먹이를 구하러 가는 어미는 어찌 그리도 헌신적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제비는 제비 새끼들을 기르느라, 인간은 제 자식들을 길러내느라 여념 없는 날들이었다. 한 지붕 아래 새와 인간이 나란히 살던, 그 자연한 공존의 풍경이 사뭇 그립다.

산책로 야트막한 언덕 아래 오래된 집이 한 채 있었다. 최후의 보루처럼 아직 헐리지 않은 그 집은 유년의 집처럼 정답고 소박하고 자연스러웠다. 마당은 정갈하게 다듬어져 있고 화단에는 푸릇푸릇 싹들이 돋아나고 있었다. 동백나무 한 그루가 수북하게 붉은 꽃등을 매달고 옆에는 연둣빛 청매화가 화사하게 피었다.

나는 오래오래 그 집을 바라보았다. 햇살 가득한 마루에 걸터앉아 한껏 주둥이를 벌린 제비 새끼들을 쳐다보고 있거나 이 가지 저 가지로 후르릉 나는 참새떼, 통통 건너뛰는 까치들을 벅차게 올려다보는 상상을 했다. 오래전의 그 집에 다시 살러 온 사람처럼 마룻장의 온기를 쓸어보기도 하였다. 세상의 모든 안락과 안온과 평화가 그 집에 다 있는 듯 기껍고 행복한 순간이었다. 깊은 몽상에 젖어 다시 돌아오는 발걸음엔 새집처럼 가볍고 소박한 꿈이 하나 사뿐히 날아올랐다.

기 고

사회학자 6천명, 광주서 '더 나은 세계' 꿈꾼다

최 협
전남대 명예교수

지난 4월 2일 국회의원 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2027년 광주에서 개최되는 '세계사회학대회 기념 특별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글로벌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세계사회학회 회장 제프리 풀레이어스 박사가 '위기에 처한 세계에서의 사회운동과 변화'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고 뒤이어 전북대 강민형 교수의 '세계화, 불평등,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학술적 차원의 평가에 앞서 이 특별세미나가 정쟁과 대립으로 얼룩진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 5인이 공동 주관하여 열렸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었다. 정쟁에 매몰된 편협한 시야에서 잠시 벗어나 보다 넓은 안목에서 세계적인 사회현상의 흐름을 조망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4년마다 개최되는 세계사회학대회는 전 세계 사회학자 6000여명이 모이는 사회학 분야 최대 규모의 학술행사 및 회의이다. 아시아 권역에서는 일본과 인도 다음으로 대한민국 광주가 3번째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세계사회학대회는 그 규모에 걸맞게 세계 학계의 주목이 쏠리는 만큼 학술대회가 열리는 동안 개최도시는 관련 분야 어젠다의 발원지이자 중심이 된다. 따라서 미디어에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도시브랜드의 인지도와 가치 상승으로 이어진다. 또한 세계대회는 본 회의에 더하여 2027년의 세계대회에 이르는 동안 조직위원회를 통해 그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여러 규모의 지역 및 주제별 회의를 개최한다. 4월 2일의 특별세미나는 그러한 활동의 일환이었다.

작년에 2027년 광주 세계사회학대회 유치 결정 뉴스를 접하고 수천 명의 참가자를 수용할 인프라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 그러나 광주는 이미 유니버시아드대회와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성공리에 치른 경험이 있고, 세계사회학대회는 학자들의 모임이기에 대학의 시설과 숙소를 활용할 수도 있어서 성공의 열쇠는 시의적절한 의제의 개발과 세계에 제시하는 메시지의 창출에 달려있다고 본다. 그런 만큼 본 대회의 철저한 준비에 더하여 앞으로 주어진 시간 동안 의미 있는 주제별 회의나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일이 중요하다.

한가지 특기할만한 사실은 광주의 세계사회학대회 유치는 지자체가 나선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학회의 집행부가 세계대회의 한국 유치방침을 정하고 개최도시를 광주로 선택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광주라는 도시가 사회학적으로 의미 있는 상징성을 갖고 있음을 뜻한다. 사회학회 집행부가 주목하였던 광주의 상징성은 5·18 민주화의 경험을 보편적 가치로 승화하여 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연대하고 공유하는 노력이었다.

더 나아가 그러한 맥락에서 광주를 아시아의 문화를 교류하고 공유하는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는 사실이 국제적인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다고 전한다.

그런 점에서 세계사회학대회는 그저 하나의 단순 학술행사를 넘어 광주시민에 바쳐지는 일종의 학술 향연의 성격을 부여받는다. 따라서 광주 공동체가 세계사회학대회를 단순히 하나의 학술행사로 그저 방관할 것이 아니라 광주시 당국과 시민사회 모두가 관심을 두고 응원을 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 그렇다면 광주 세계사회학대회의 준비에는 광주시는 물론 5.18 재단,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같은 단체나 조직과의 긴밀한 협조와 협업이 필요할 것이다.

다행히 지난 몇 달 동안 세계사회학대회 준비위원회에서는 장원호, 임현진 교수 등이 광주를 수시로 방문하여 시 당국, 5·18 재단 관계자 등을 만나 협의를 진행해왔고, 세계대회 동안 해외의 참가자들이 방문할 수 있는 장소의 하나로 포용과 환대의 사례가 될 수 있는 고려인마을을 찾아가 의견을 나누었다고 한다.

세계사회학대회에는 사회학자뿐만 아니라 여성학, 인구학, 정치학 등 다양한 인접 학문 연구자 등 6000여명이 참여하기 때문에 광주지역의 여러 분야 활동가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현실화하면 2027년 광주에서 개최되는 세계사회학대회는 그야말로 세계인이 광주에 모이고 광주의 시민사회가 함께하여 국가와 개인, 이웃, 사회가 어떻게 새로운 관계를 구축할 것인가를 논하고, 그리하여 더 나은 세계를 위한 공감대를 열어가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다.

社 說

법치와 민주주의 상식 확인시켜준 헌재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파면하면서 결정문 말미에 밝힌 내용이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절차적 요건 위반,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국회·정당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발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 5가지 탄핵소추 사유 모두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헌재 선고가 의미있는 이유는 '8대 0' 결정에 탄핵소추 사유 모두를 위헌으로 결론 냄으로써 '심리적 내전'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분열된 국론을 수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있다. 헌재 선고 이후 극우세력의 반발이 잦아 든 것도 이들에게 한치의 빌미도 제공하지 않을 만큼 완벽한 논거로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불법성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결정문 도입부를 헌법 제1조 제1항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시작해 마지막 문구에 헌법 전문(前文)에 등장하는 '대한국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민 주권주의라는 헌법정신을 피청구인측은 물론 온 국민들에게 다시금 인식시켰다고 할 것이다. 선고가 늦어지면서 갖가지 추측과 국민들의 불안도 있었지만 헌재는 법치와 민주주의의 상식을 확인시켜주는 결정문으로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라는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다.

12·3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탄핵정국은 이로써 일단락을 짓게 됐다.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매듭지어진 탄핵정국은 헌정사의 비극이지만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승리이다. 이제 헌재의 결정을 극단으로 치닫으면서 분열 양상을 보였던 국론을 다시 통합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여러가지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 우리 모두 힘을 한데 모아야 할 때다.

승복 없는 尹…형사재판으로 단죄해야

헌법재판소의 파면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윤석열은 마지막까지 승복은 커녕 분열정치로 대한민국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

윤석열은 지난 4일 파면 결정 후 내놓은 짤막한 입장문에서 '승복' 언급 없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했다. 6일에는 자신을 지지해온 '국민변호인단' 앞으로 낸 메시지를 통해 "청년 여러분께서 용기를 잃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며 "저는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현실이 힘들어도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요.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십시요"라며 마치 폭동을 유도하는 듯한 메시지를 냈다.

파면으로 대통령이 아닌데도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조기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마지막까지 당내 입지를 강화하려는 웃지 못할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일반인 윤석열은 이제 내란죄를 비롯해 수많은 혐의로 형사재판을 기다리는 피고인 신분이다. 대통령으로 재직한 2년 11개월 동안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론을 분열시킨 것도 모자라 파면 이후에도 일부 지지층만을 겨냥한 정치 메시지로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어떻게든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불안감의 표현에 불과하다.

탄핵정국의 진정한 마무리는 윤석열에 대한 빠른 형사재판 진행으로 내란죄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단죄하는 일이다. 윤석열은 내란죄 외에도 명태균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고 있고 부인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각종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보여주었듯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 형사재판을 지연시키려 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철저한 수사와 명징한 판결로 윤석열과 김건희가 받고 있는 의혹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제대로 묻는 것이 탄핵정국을 마무리 짓는 길이다.

無 等 鼓

파면 결정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은 국민 다수의 바람대로 '파면'이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한 7200자 분량의 선고 요지에는 대한민국 정치를 바라보는 깊은 고민과 우려가 담겼다.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라며 정치의 실종을 일갈했다. 다수당인 야당을 겨냥한 주문도 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

헌재 재판관 8명 가운데 4명은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헌재법 40조 1항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 보충의견을 냈다. 형사소송법 312조 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의자였던 피고인(공범 포함) 또는 변호인이 재판에서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만 증거로 쓸 수 있다. 헌재는 심판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한 공범들의 검찰 신문조서를 채택해 논란을 불렀다.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조항들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수사기관 작성의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는 그 절차의 적법성이 담보되는 범위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헌재의 판단을 지지했다. 반면,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심판의 중대성,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할 때 헌재가 앞으로는 탄핵심판절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줄탄핵'에 대해 "실질적으로 주요 소추사유에 변동이 없는 탄핵소추안의 재발의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면서 "탄핵소추의 성격과 본질, 국회의사의 조기 확정과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고위공직자를 탄핵소추한다는 공익 사이의 형량 등을 고려해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권좌에서 퇴출됐지만, 헌재 재판관들의 보충의견은 사법당국, 입법부, 국민이 두고 두고 숙고해야할 과제로 남았다.

/윤영기 정치·경제 에디터 penfoot@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